

第139回 臨時會

市政質問・答辯

大田廣域市議會

安 重 起 議 員

“대전이 국가균형발전 중핵도시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西區 第2選舉區

목 차

1. 복지만두레 운영 관련	6
2.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14
3. 이공계 출신 취업 관련	20
4. 원도심 활성화 관련	23
5. 대전시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 준비 관련	28
6.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33
7. 학교 등 신축건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관련	40

서구 제2선거구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홍성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찬반으로 양분되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흑백논리로 그려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국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국론 분열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참여정부의 실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 대전은 인접자치단체와의 다각적이고 치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동북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륜장건설, 간선급행버스(BRT)도입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타 도시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민의를 철저하게 수렴하여 발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숙원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산하공직자 여러분!

대전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은 여러분 누구도 최고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는 시민 대표로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안사항 및 시민들의 관심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염홍철 시장과의 일괄질문·일괄답변

※ 보는 이의 편의를 위해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질 문

첫째, 복지만두레 운영입니다.

복지만두레 사업은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50%의 결연율을 보이며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보완하였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는 지역별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동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대상자 수가 2배정도 많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관심이 더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수혜의 부익부 빈익빈의 예방과 지역적 복지편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만두레의 목표가 다같이 잘사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전하게 뿌리내릴 때까지는 인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복지수요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만두레 주요보호대상자 전체의 35%에 달하는 동구지역 등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약사·의사 등 복지 공급자를 대폭 지원해 주고, 복지만두레 운영지원예산 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지원을 통하여 복지만두레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균형적인 지원을 통하여 고루 잘사는 대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대적 차등지원을 통한 복지만두레 정착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만두레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차원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정작 빈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빈곤가정이 지니는 학습능력 부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학습센터의 신설 등 다각적인 교육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지도나 특기지도, 그리고 영유아 보호 등 아동학습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만두레는 향후 만두레 서비스의 제도화와 회원 및 참여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예산사업인 복지만두레가 시의 정책사업임을 등에 업고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복지만두레 사업시행이후 사회지도층 인사나 기업체등에서 지금 까지 적지 않은 성금을 기탁하여 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만두레가 돈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성금기탁이 본사업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많은 걱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조금 후에는 심현영의원님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스웨덴 옴살라에서 있었던 제4차 WTA 총회에 참석 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네스코와 WTA간 양해각서 즉 MOU체결협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EU국가에서 처음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전개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 6년 여 만에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실감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우리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연기·공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핵심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성장 동력인 대덕R&D특구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 때 보여주셨던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힘의 결집이 필요한 때이므로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점검하고 복지만두레 주요보호대상자와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하여 남은 기간에 현안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회의 지대한 관심과 비판, 대안제시를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 최고도시 대전 건설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 먼저 복지만두레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도 이 복지만두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랄까 정확한 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복지만두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전반을 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복지정책, 노인·장애인복지, 양성평등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복지정책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복지정책, 노인·장애인·여성에 대한 복지시책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18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18개의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시책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만두레란 뭐냐, 이게 옥상옥 아니냐,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만두레는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기업·사회단체·학교 등을 복지현장에 끌어들여서 관과 민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복지시책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복지만두레에서 해결해드림으로써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수요를 충족해 드리는 시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의 공식적인 시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오히려 강화하면서 관·민·공·사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나눔의 문화, 섬김의 문화,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정신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규정에 관계없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현재까지는 6,840세대를 찾아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발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동안 복지에 관심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기업·사회종교단체·의료기관 등을 연결해 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안중기의원님 질문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구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동구는 현재 복지만두레의 보호대상이 1,873세대입니다.

그중에 83%인 1,554세대가 결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대상이 많기 때문에 결연세대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복지 지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약사 등 전문의료인의 총 참여자가 466명입니다. 그중에서 동구와 중구의 참여자가 280명으로서 대전시 전체의 60% 이상을 동구, 중구에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의료인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복지수요자가 많은, 안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 동구같은 어려운 지역에 관련 학과 대학생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를 더 많이 투입시켜서 집중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특기지도 및 영유아보호 등 아동학습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지만두레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동교육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생활 영어체험학습관이라든지 또 14개소에서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또 30개소에서 방과후 보육전담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40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해서 무허가 공부방 12개를 개보수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이 현금기탁이 사업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만두레는 복지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1 대 1 결연을 통해서 보호지원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행정지원 또 복지만두레 수요자들 즉 보호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인터넷에 D/B구축을 한다든지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을 기탁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만두레 참여방법 입니다.

어느 분은 노력으로 하고 어느 분은 어떤 복지만두레 참여를 통해서 정으로 그분들을 보살피고 또 어느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노력으로 봉사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금을 내서 이 성금을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는것도 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2억 3,248만원의 성금이 기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비예산사업이라면서 어떻게 편성해 쓸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한 건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대전 약사회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전 가구에 비상구급약을 제작해서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총사업비가 6,72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약사회에서 그중에 50%를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50%는 지금 복지만두레 성금은 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50%를 지출했습니다. 대개 이런 방향으로 쓰려고 합니다.

질 문

둘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문제는 아동문제도 여성문제도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의 취업은 M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결혼 전까지 상승하던 취업률이 출산·양육 부담이 커지는 30대 전후에서 뚝 떨어지고 40대 이후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 대졸여성 취업의 경우 취업의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취업률은 가장 낮은 실정이며,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도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여성들의 저 출산율과 취업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육아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육아시설이 직장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아이와 함께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육아시설의 건립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언적인 영유아 보호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 모범도시”를 추구하는 시로써 이런 엄청난 예산을 마련하기 보다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단기간에 다양한 육아시설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활용되지 못하는 업무공간을 육아시설로 활용한다면 산업생산성 제고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는 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은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다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그리고 보편적 가치로서 육아를 책임질 주체는 정부, 기업, 부모 모두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인 향상, 그리고 자녀양육을 사회의 책임으로 여기는 공감대라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의 증가와 저출산율 등으로 가정의 해체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육아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혼후 자녀를 떠맡은 여성, 즉 모자가정의 빈곤율은 30%를 넘고 있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여성취업의 높은 벽은 또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와 관련 육아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정책적 배려에 대한 대전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의 기고에서 대전시 798개 보육시설은 2006년까지 충분하다고 하나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족 혹은 불신으로 이용률이 낮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인적·물질적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보육시설에 대한 기자재 지원,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등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두 번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하는 점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장보육시설 이것 직장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법의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켜지지 않는 업체나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대전은 직장 보육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이 네 군데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곳도 일곱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미설치 사업장은 지금 현재 4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 개소 국민은행콜센터는 지금 유성에 독립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전에서는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사업장 또 법적으로 의무가 없더라도, 여성고용근로자가 300인 이하일지라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협조로서만 하는 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 취업여성의 육아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추진계획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 아주 모범적으로 수범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취업여성들의 보육지원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한 단계 더 넓혀서 4단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차차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육료지원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는 60%입니다. 차차상위는 40%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매년 5%씩 상향 조정해서 2008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100%, 차상위 80%, 차차상위 60%, 차차차상위 40%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아동의 간식비 지원을 내년부터 650원씩 지원을 하고 매년 일정한 수준까지는 100원씩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아주 특수한시책을 하나 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아동 즉 부모, 주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보육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보육시설에 맡기므로써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지만 부모가 직접 기른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직접 보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시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양육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와서 육아상담이라든지 자녀양육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또 약간의 놀이 시설을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우선 2개소 설치하고 이것은 각 구별로 한 개소씩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육서비스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기자재 지원이나 보육교사 사기진작 등과 관련한 시 차원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 2일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성대회 때 영유아보육수범도시 육성을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보육시설 또는 보육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첫째 보육이라는 것은 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 이것은 사회성,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양육지원센터를 구별로 1개소,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를 양성해서 가정과 보육시설에 파견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아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또 연수비용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특별수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교사 대 영아의 비율이 1 대 5입니다. 앞으로 1 대 5 비율을 1 대 3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행정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보육계획 수립이라든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지금도 있습니다만, 기능을 활성화하는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 문

셋째, 이공계 출신 취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공계 기피현상 및 청년실업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각 대학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전공학과의 모집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에서조차 이공계 취업의 벽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공계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공계 졸업생 취업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만, 대학생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추진이 시장·총장 공동명의로 취업협조 서한문 발송이나 취업관련 홈페이지 링크, 취업간담회 등과 같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책 뿐입니다.

이공계 출신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산하 지방공사의 채용시 지역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우대정책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취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공계 출신 취업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대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매달려도 아주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이공계 교육의 어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대학에서는 구직난, 이와 같이 구인난과 구직난이 모순되게 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이 정말 맞춤형 교육을 하느냐?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서 그 기업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삼성기업 같은 데는 오히려 맞춤형 교육을 해서 우리가 상당한 장학지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재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이 더 든다 하는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교육, 실사구시적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학 협력이 중요합니다. 교수라든지 대학원생들이 산업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술이전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이런 산·학 협력을 통해서 취업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보다도 인문사회계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국민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문사회계가 이공계보다 보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이런 문제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몇 가지 저희들이 강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안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수궁할 만한 그런 확실한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모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학기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 학점으로 다 인정합니다. 한 학기 내내 현장에 가서 실습하면 그것을 다 학점으로 다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학교가 우리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운영을 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생들의 벤처동아리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에 대한 우선채용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방공사 직원 채용 때 이공계 출신 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과학 기술도시라고 하면서 이공계출신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질 문

넷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은 대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공동화되면 나무의 성장에도 장애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주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정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으며, 원도심 문제가 매년 거론되는 이유가 대전의 균형 발전 없이 대전의 미래도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해소방안으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천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문제는 행정기관 등 주요 관공서가 원도심에서 둔산 등 신도심으로 급격하게 이전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신도심에 집적되어 있는 문화와 교육서비스를 원도심으로 분산하여 도심기능을 분담하게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이응노 미술관 같은 대형 문화공간을 원도심 지역으로 유치한다면 원도심 문제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굵주린 자에게는 밥을 맛있게 하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맛있게 하기가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반영되는 정책이야말로 불필요한 재정부출과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역세권개발, 동남권 개발, 은행동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의 기능보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화공간, 교육시설, 녹지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성화 사업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총량을 일정수준까지 원도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중장기적인 원도심 활성화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답변

네 번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제가 3대 시정목표 중의 하나를 원도심 활성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이런 시책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대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원도심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 구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활성화기금을 현재 한 47억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원도심 기능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특화거리 육성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기능보완을 위해서는 문화공간, 교육시설, 녹지시설 등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도로를 내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만이 그것이 도심의 활성화는 아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공간이라든지 교육 공간이라든지 녹지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총량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개발할 때 꼭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 때 교육·문화·녹지시설 건립용지로 전체 15%를 확보할 예정이고 또 동남부권 개발시에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노미술관 같은 대형 문화시설을 그쪽에 유치하면 어떠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시다만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응노미술관은 대형 미술관은 아닙니다.

밑에 대지면적이 2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실 소형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공공미술관 같은 것은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접근성을 봐야 됩니다.

동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당연히 동구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또 확대해야 되지만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람객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보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것은 도심에 있습니다. 대개 걸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다른 문화 예술시설과 클러스터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집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도 말은 예술의전당입니다만 거기에 모든 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서울시 전역에서 그 시설에 와서 거기서 미술도 감상하고 음악회도 감상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이응노미술관을 원도심에 해놓으면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하고 같이 붙여 지으면 시립미술관의 인력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경비도 훨씬 적게 들고 또 시립미술관 보러 오는 사람이 이응노미술관도 보고, 이응노미술관 보는 사람이 시립미술관도 봐서 서로 상승 발전을 할 수도 있다 또 그 옆에 문화예술의전당도 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은 지금 현대미술 위주이고 이응노미술관은 근대미술이기 때문에 현대, 근대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문화 예술을 한쪽에 모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면 먼저 역세권 개발입니다.

저희가 18만평을 개발하고 또 철도청에서는 별도로 한 7~8만평을 개발하니까 한 26만평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사업 설명을 했더니 우리 나라 우수한 대기업 한 70여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튼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부권 개발 이것도 한 5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6개 지구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도 지금 16개 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오지구 또 낭월지구 또 도심재개발은 대흥동이라든지 은행동, 목동 등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실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문

다섯째, 대전시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4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은 이제 시대적 사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핵심이 권한의 지방이양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중앙으로부터 우리 시에 이양된 행정 사무를 조사한 결과 총 146건으로, 앞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이 과감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 공무원 수의 증가율을 보면 최근 5년평균 2.3%의 수준이며,

또한 시에서 구로 위임된 업무는 최근 5년간 109건으로, 구 공무원 수의 증가율을 보면 최근 5년평균 1.5%의 수준으로서, 일부 구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공무원 수는 줄어드는가 하면, 일부 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등 구별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에 따라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전시의 6대 집단으로 본다면, 지역대학, 지역언론, 지역산업체, 지역시민사회단체,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전이 국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보화수준, 분권 의식, 대시민서비스 향상 방안과 공무원 채용계획 및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구별 공무원 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과 관련하여 두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운운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적 또는 중앙집중적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무가 73%입니다, 기관위임사무가 3%이고, 지방사무가 24%입니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사실은 지방분권을 가장 강조하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 분권 후 보완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을 참여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위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우리 대전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24일날 지방화 대전선언을 했습니다. 혁신 주체가 지방화되어야 된다, 문화예술이 지방화되어야 된다, 복지환경이 지방화되어야 된다, 시민역량이 지방화되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지방화 또는 분권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는 사실은 지방이양촉진법을 1999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방일괄이양법을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괄 이양할 대상이 67개 법률에 326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화되고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계획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별로 공무원 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와 유성구는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구와 대덕구 같은 데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조직원의 증가와 행정수요의 증가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인구에 20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0명이면 40명, 3,000명이면 60명이 아니라 2,000명이면 12명, 3,000명이면 18명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공무원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와 공무원 증가가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말 한 마디로 지금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불균형이 있는가를 철저히 파악해서 불균형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기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질문의 취지를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교육감과의 일괄질문·일괄답변

※ 보는 이의 편의를 위해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질 문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100여만명이 수능강의에 가입했으며, 전체학생의 32%가 과외를 줄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행 첫 해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달후 실시되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 수능시험은 EBS 강의에서 상당부분 출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당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일반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일익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조사에 의하면 수능강의 만족도에 대하여 학생의 75.7%, 교사의 82.5%, 전문가 72%, 학부모 58.4%가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 특성상 강의속도가 빠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등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많은 부분 반영되고 연계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기할 수 있도록 EBS 보강학습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아 오신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답변

열이 오른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듯 밤마다 맑은 이슬을 내려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백로의 절기가 더없이 반가운 것은 아마도 금년 여름이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시민들의 진솔한 민의를 가감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면서 열린 의정실현에 앞장 서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원숙한 경륜, 전문적인 식견에 힘입어서 대전교육은 교육가족들의 슬기와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인성과 학력이 좋아지는 교육본질 추구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지식기반을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으로 설정을 하고 사람다운 품성함양, 창의적인 교육활동 강화, 활기찬 교육풍토 조성, 다양한 교육복지실현, 교실 중심 지원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대전교육에 대한 교직원들의 노력,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신뢰가 본바탕이 되었습시다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남다른 열정, 애정, 관심 그리고 탁월하신 교육적 비전 제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되어서 교육 관련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요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가정 경제의 사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갑 열기가 무섭다고 하는 시점에서 가정경제 지출의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에 대한 화두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문제를 짚어주시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안중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3월 12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발 맞춰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는 절차를 밟고 경감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공교육강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경감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우리 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무엇보다 E-learning 체제를 발빠르게 구축 운영했습니다. 또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특기적성 활성화등 모두 10가지 대책을 현실에 맞게 과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나눠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E-learning 체제의 학습체제를 100% 구축 운영하는데 최단기간 내에 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1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을 100%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수업시간에 EBS교육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고, 각 학교에 동영상 자료를 비축하고 실시간 대에 또는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파일 서버를 학교마다 비치해 드리고, 학교마다 한 교실 이상 인터넷 방송 특별 시청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고등학교 3학년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어 약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3학년 교실에 540대의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자율학습시간에 EBS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교수학습지원센터에 1만 8,000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VOD 시스템을 구축한 바 24시간 수능방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 동·서부교육청 홈페이지에 각각 사이버 스쿨, 사이버 스터디를 운영해서 초·중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수준에 맞는 학과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한 바 있고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받아들여진 바도 있습니다.

그밖에 총 21억 1,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 1,760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고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이동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해서 평준화 논란에 의한 능력별 수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보충 학습을 실시하고 중·고생들의 보충심화학습에 따른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합시다만, 고등학교가 74%, 중학교가 54%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선생님들이 자료 부족을 호소해 오시고 그래서 4개 학년의 수학, 영어 수준별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이미 학교별로 보급한 바가 있고 특히 고등학교의 영어교재는 전 학생들에게 시의 교육청 자료를 배부한 바가 있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내실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국어, 수학, 영어, 역사, 과학 등 5개 수준별 보충 학습교재를 이미 개발 보급한 바가 있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과목의 수준별 지도자료도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보습 또는 보육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2004년 9월 1일 현재 초등학교 41개교에서 모두 782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특히 우리 시의 교육정책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염홍철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천해양수련원이 이제 개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평소에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영어캠프로 전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의 개선입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학업성적 평가방법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조직하고 학교의 성적평가 문제를 제출받아서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을 분석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잡음을 없애는 이런 일련의 평가문제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의 7억 6,000만원 등 12억

1,000만원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지원비를 받아서 방과후의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요즘 말씀드리면 소위 자율학습경비라는 것을 대전은 일체 걷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화후 교육활동에 따른 자료개발, EBS 프로그램 시청, 자율학습지도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징수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밖에도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1,641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재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경시대회 수상 성적의 반영도 연차적으로 줄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교육비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대학입시 사이트를 운영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각종 진학정보를 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의 이러한 추진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앞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정착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 대전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품질화에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교육의 강화에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질 문

둘째, 학교등 신축건물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는 신축건물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신축 교실에서도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보면, 성장기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벤젠·톨루엔 등을 측정한 결과, 오래된 건물보다 신축건물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고, 그 수치 면에서 볼 때 대책마련이 필요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등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불과 보름후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누면 배가되는 것이 따뜻한 정과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에는 시설보호자,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답변

두 번째, 신축건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축건물의 실내환경기준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에는 학교에 대한 적용이 빠져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들의 건의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보건법에 관련돼서 기준 보완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신축학교 설계부터 설계서에 친환경건축자재 우선 사용, 환기대책, 이런 것들을 명시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시에 구입하는 교재, 교구, 집기류가 있습니다. 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제품들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제품, 그리고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특히 공사 중에 바닥재, 페인트 등 이런 휘발성이 강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된 공사의 철저한 관리, 환기대책 이러한 공정 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서 금년 9월 1일에 개교한 대정초등학교부터 시민환경기술센터의 측정을 의뢰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신축 학교는 개교 이전에 반드시 공인기관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고,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전 교육은 대전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그런 교육본질의 추구를 위해서 그리고 따뜻한 감성, 도덕적인 품성을 지닌 사람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각각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과감한 행정권한의 위임, 이양,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성과도 잘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소녀 가장으로 백행의 근본이 되는 효행 실천으로 2003년 한국을 빛낸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이 있는가 하면 21세기를 선도할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전국 생물올림피아드대회

에서 수상을 하고, 특히 국제과학경진대회에 5팀이 참가하는
중에서 3팀이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수상한 팀도 공교롭게도 대전의 학생들 3팀이 모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들 때문에 걱정들 하시고 일부 잘 모르
시는 분들이 학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난
3월, 6월에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대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각각 영역별 상위권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3% 이상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자 또 금일 신문에 보시면 각종 신문에 많이 나와 있
습니다만,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설명자료에서도 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대전의 합격생 수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 정보과학
올림피아드경시대회에서는 초·중·고별로 최고상을 다 대전 아이들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모범 사례로 채택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 스터디 운영과 학부모 아카
데미 운영은 대단히 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져서 전국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10일자 모 신문 학력성취도
조사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중학교의 경우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구
다음으로 저희들입니다, 전국에서, 서울의 각 구를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대전교육 믿으셔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또 여러 분들의 격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청렴도 우수기관의 선정을 출발로 행정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광역 교육청 단위에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늘 걱정하시리라는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 순간도 처음 시작할 때 마음과 같이 대전교육발전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임기 후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성공한 교육감이기보다는 할 일을 다한 교육감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약속과 더불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안중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